

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


- 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33조 6,825억원으로 확정 -

12월 21일,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지출 규모 33조 6,825억원으로 의결되었다.

* 〈23.〉 34.95조 → 〈24.정부안〉 33.60조 → 〈24.최종〉 33.68조 (작년 대비△1.27조)

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은 ❶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, ❷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, ❸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내용으로 하는 “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 3대 과제”에 집중 투자했다.

당초 정부 예산안은 33조 6,0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,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청년취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등 23개 사업에서 815억원이 증액되었고, 직업안정기관운영 등 6개 사업에서 29억원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는 정부안 대비 786억원이 증액되었다.

 세부 내용은 이하 「2024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」 참고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	책임자	과 장	홍경의 (044-202-7026)
	기획재정담당관	담당자	사무관	남성욱 (044-202-7034)

1.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

1 불공정한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.

- **(임금체계 개편)** 업종별 임금 실태조사 및 기업·업종별 임금체계 컨설팅 신설,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제공 강화

✓ 상생협력 확산 지원(210억): ▲업종별 임금실태조사(4억) ▲**신규**통합형임금정보시스템(28억)
▲**신규**업종별 임금체계컨설팅(60억), ▲**신규**NCS 컨설팅 內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신설(150건)

- **(복지 확대)** 中企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용자·근로자에게 정부가 부담금 일부 지원, 상생협약 체결 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확대

✓ 퇴직연금운영: <23> 156억 → <24> 223억(사업주·근로자 각각 사업주 부담금의 10% 지원(192억원))
✓ 근로복지기금: <23> 155억 → <24> 233억(원·하청 상생협약시 3년간 年 최대 20억 지원(기존 10억))

- **(역량 제고)** 기업직업훈련카드 확대(²³ 1.3만 → ²⁴ 2만개),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신설 등 中企 훈련 접근성 제고를 통한 훈련 격차 해소

✓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: <23> 3,030억 → <24> 3,568억
↳ ▲기업직업훈련카드(23. 307억 → 24. 476억) ▲**신규**패키지구독형원격훈련(140억, 10만명)

- **(취약근로자 보호)** 비정규직 등 미조직 취약근로자 대상 권익 보호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설

✓ 취약근로자 커뮤니티 구축 및 활성화 지원(**신규**34억, 소통·의견수렴, 법률상담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19억 → 34억, +15억)
✓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內 이중구조개선 신설(**신규**41억)

2

상생 · 협력을 정부가 뒷받침 하겠습니다.

○ (노·사) 원청 노사 출연 + 격차 완화에 활용 시 정부 매칭 지원

- ✓ 상생연대 형성지원(신규 50억): [매칭] 사측 출연분 100%, 근로자·노조 출연분 200%
[활용] 협력사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 등

○ (원·하청) 원·하청이 안전보건 관련 상생협약 시 컨설팅 비용 등 지원

- ✓ 대중소안전보건상생협력: <23> 99억 → <24> 118억

○ (대·중기)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훈련과정 공유·개방 시 운영비 등 지원

- ✓ 대중소상생아카데미(신규 122억): 대기업에 프로그램 개발·운영비 등 지원, 중기근로자 공동 훈련 실시

3

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니다.

○ (중소 안전역량) 원·하청 간 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, 중소규모 사업장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집중 지원

- ✓ 안전동행지원사업(4,025개소, 3,220억),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·확산(2,544개소, 350억)
- ✓ 산재예방시설용자: <23> 3,563억 → <24> 4,586억(+580개소)
- ✓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(컨설팅): <23> 382억 → <24> 684억(1.6 → 2.7만개소(+10,500개소))
- ✓ 공동안전관리 컨설팅(신규 126억): 협·단체가 공동안전관리 전문가 통해 50인미만 사업장 컨설팅 제공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+126억)

○ (안전보건 인프라) 직업성 질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대 (근로자건강센터 등), 통합 산재예방서비스 제공 포털 구축

- ✓ 근로자건강센터: <23> 208억 → <24> 221억(근로자건강센터 +1개소, 트라우마센터 +9개소)
- ✓ 산재예방 365포털 구축: <23> 5억 → <24> 124억

○ (산업재해보상) 특고 등 노무제공자 및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 추가, 건강손상자녀 산재(태아산재) 특례 등

- ✓ 특고 전속성 폐지(+472억), 방과후 강사 등 8개 직종(+468억), 태아산재특례(+20억)

2.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

1 빈 일자리와 적합 인력의 매칭을 지원합니다.

- **(지역 연계 매칭)** 자치단체가 지역·산업별 특성에 맞게 중앙정부 일자리사업에 연계·추가 지원하는 「지역형플러스일자리사업」 확대

- ✓ **지역형플러스:** <23> 356억 → <24> 667억(조선, 뿌리 등 지역 구인난 업종에 채용장려금 등 지원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652억 → 667억, +15억)
- ✓ **지역혁신프로젝트지원:** <24> 145억(주력산업 구인난 개선 및 신성장 산업 지원에 정부·지자체 매칭 지원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109억 → 145억, +36억)

- **(청년 매칭)**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지원

- ✓ **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**(^{신규}499억):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 후 3개월차 100만원, 6개월차 100만원 지원(청년 2.5만명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483억 → 499억, +16억)

- **(외국인력 활용)** 도입 규모 확대('24. 16.5만명) 및 중앙·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통해 상담·훈련·생활지원 등 체류 관리 강화

- ✓ 고용부(27억, 지방관서·인력공단): 고용허가제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 훈련 제공,
- ✓ **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** 위한 자치단체 보조사업 신설(^{신규}18억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+18억)

2 현장이 필요로 하는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.

- **(핵심인력 양성)** 플랫폼중사자특화훈련 등 저성과 훈련 폐지→ 산업수요가 많은 디지털·첨단산업(반도체 등) 등 인재 양성 확대

- ✓ K-Digital Training: <23> 4,163억 → <24> 4,732억(+74백명)
- ✓ 첨단산업공동훈련센터(+15개소)·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확충(+5개소)
- ✓ 폴리텍 학과 신설·개편(반도체 10개 신설, AI+X·저탄소 각 5개 신설, AI소프트웨어 등 15개 개편)
- ✓ 폴리텍 신산업분야 비학위과정(하이테크과정) 확대(23. 66개 → 24. 90개)

- **(현장훈련 강화)** 개별기업의 특성·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·제공하고, 이에 필요한 훈련비·훈련강사·컨설팅 등 지원

✓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: <23> 134억, 1,920개소 → <24> 161억, 2,300개소
 ✓ 일반직무훈련(채용예정자훈련): <23> 1,479억 → <24> 2,134억(채용예정자 +600억)

- **(돌봄 분야 신설)**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·아이돌봄 등 돌봄 분야 특화 훈련과정 신설

✓ 돌봄 서비스 훈련(신규 350억): 총 10만명(요양보호사, 아이돌봄), 先부담 환급제도 도입

- **(일학습병행 확대)** 외국인 유학생을 재학 단계부터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외국인 일학습병행제 도입, 제조·뿌리산업 중심 신속 연계

✓ 외국인유학생 일학습병행 신설(신규 124억, 1천명)

3 고용서비스를 내실화합니다.

- **(고용서비스 고도화)** 고용안전망 및 서비스 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본연의 기능인 “취약계층 지원”에 보다 주력하는 방식으로 개편

✓ 국민취업지원제도: <23> 1조 2,255억 → <24> 9,425억
 ↳ <23> 1유형 40만, 2유형 7만, 일경험 1.7만 → <24> 1유형 24.8만, 2유형 6만, 일경험 1.5만
 ✓ 구직급여제도: <23> 11조 1,839억 → <24> 10조 9,144억
 ✓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: <23> 1조 764억 → <24> 8,375억

- 유관기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**통합네트워크** 확충을 통해 효율적인 고용서비스(원스톱+맞춤형) 제공

✓ 고용서비스통합네트워크: <24> 78억(2개소 신축, 기존 4개소 운영 비용 등)

3. 노동시장 참여 촉진

1 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.

- **(일경험 확대)**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트렌드를 고려하여, 실무경험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일경험 지원 확대

✓ 청년일경험지원: <23> 553억 → <24> 1,718억

↳ ▲일경험 지원 확대(2.6→4.8만명), ▲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 신설 ▲통합플랫폼 구축 등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+56억)

- **(자격시험 지원)** 청년이 부담 없이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고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료의 50%를 지원

✓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(신규242억):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50% 할인 제공

- **(맞춤형 지원)** 재학생(고교+대학)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특성화고 신기술 훈련 확대, 근접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확충

✓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: <23> 407억 → <24> 831억

↳ ▲고교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(신규62억) ▲대학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(+304억),
▲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(+20개)

✓ 미래유망분야고졸인력양성: <23> 75억, 55개 → <24> 118억, 75개

2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합니다.

- **(청년 니트)** 청년 니트(NEET)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, 전담 인프라 등 마련(참여의욕 고취, 취업지원 연계)

✓ 청년도전지원사업: <23> 408억 → <24> 709억(+301억)

↳ ▲청년도전지원(+20억, 9천명) ▲신규 청년성장프로젝트(+281억, 지자체(10개) 연계 니트 사전예방·발굴 등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프로그램 이수·취업 후 3개월 근속 인센티브, +3.5억)

○ **(해외진출 청년) K-Move 스쿨 지원 확대 및 연수 장려금 신설**

✓ K-Move: <23> 201억→<24> 324억(▲지원 확대(+1천명) ▲**신규** 연수장려금(최대100만원)신설(+28억))

○ **(다문화 청년) 다문화 청년의 사회진출 및 경제적·사회적 자립 역량 강화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 과정 신설**

✓ 다문화 청년(18~24세) 대상 직업훈련(폴리텍): <24> **신규** 22억(200명)

3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.

○ **(맞돌봄 급여 상향)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상향 지원(3+3 → 6+6)**

✓ 개편사항: (사용가능 자녀연령) 생후 12개월 내 → 생후 18개월 내,
(특례 적용기간) 첫 3개월 → 첫 6개월, (상한액) 월 최대 200~300만원 → 200~450만원

○ **(육아휴직 기간 연장)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을 추가 부여(1년→1년6월)하고, 연장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 지급**

✓ 육아휴직급여: <23> 1조 6,964억 → <24> 1조 9,869억,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

○ **(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) 부모의 경력단절 예방과 8세 이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기간 및 자녀연령 확대 등 지원 강화**

✓ 개편사항: (자녀연령) 8세, 초등학교 2학년 → 12세, 초등학교 6학년 이하
(사용기간) 최대 24개월(1년+육아휴직 미사용기간) → 최대 36개월(1년+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의 2배)
(급여지원) 주당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% → 주당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%

✓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: <23> 937억→ <24> 1,490억(+553억),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

○ **(난임치료휴가 급여) 난임치료휴가 활성화 위해 급여지원제도 신설**

✓ 개편사항: (기간) 연간 3일(최초 1일 유급) → 연간 6일(최초 2일 유급)
(급여 신설) 최초 2일 급여 지원(우선지원 대상기업)

✓ 난임치료휴가급여: <24> 37억(신설, 22,997명 지원),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개정 전제

4

취업장벽과 애로요인을 제거합니다.

- **(장애인)**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·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등 고용촉진 강화, 표준사업장·디지털 훈련센터 등 취업 인프라 확대

- ✓ 중증장애인출퇴근비용지원(월 7만원(+2만원)), 장애인고용장려금(3,119억, +302억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+18억)
- ✓ 장애인취성패 확대(13천명, +2천명)·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
- ✓ 근로지원인(11천명, +5백명), 중증장애인 인턴(1천명, +3백명)
- ✓ 표준사업장 설립지원(172개소, +25개소), 보조공학기기(15천점, +1천점)
- ✓ 디지털 맞춤형 훈련센터 구축(+4개소), 발달훈련센터 가상훈련시스템 구축(+5개소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+1개소, +21억)

- **(고령자)**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확대(2→3년) 및 맞춤형 취업지원 인프라인 중장년내일센터 확충

- ✓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(+82억), 중장년내일센터 확충(+3개소), 고령자고용지원금(2.5만명)
↳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+23억, 지원기간 2→3년 확대)

- **(유연근로 활성화)** 재택·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 형태 활성화

- ✓ 중소·중견기업 육아기 시차출퇴근 지원(+24억), 육아기 재택·원격·선택근무 지원 단가 상향(+5억, 단가 +10만원) →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(시차출퇴근 +14억, 단가 +5억)
- ✓ 일·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(+20억)

- **(장시간 근로개선)** 소정근로시간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시에도 月 30만원을 지급하고, 근로시간 개선 컨설팅 통합·고도화

- ✓ 고용안정장려금(위라벨일자리장려금): <23> 296억 → <24> 339억(+43억)
- ✓ 일터혁신 및 기업 컨설팅: <24> 440억, 사업별로 산재한 근로시간 관련 컨설팅 통합·고도화

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
3대 과제에 재정투자 집중(33.7조원)

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	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	노동시장 참여 촉진
<p>불공정 격차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금체계 개편 지원 • 중소퇴직기금 등 복지지원 • 中企 훈련지원 강화 • 취약근로자 보호 신설 	<p>빈일자리-적합인력 매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연계 매칭 • 청년 매칭 (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) • 외국인력 도입 확대 	<p>청년이 원하는 프로그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년 일경험 확대 • 국가기술자격시험 지원 •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
<p>상생·협력 정부 뒷받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노·사 상생연대 시 정부 매칭 지원 • 원·하청 안전보건 상생협약 체결 지원 • 대기업·중소기업 훈련 상생아카데미 	<p>현장 필요 훈련 제공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디지털·첨단산업 등 핵심인력 양성 • 현장 훈련 강화 • 돌봄 분야 훈련 신설 • 외국인 일학습병행 신설 	<p>소외 청년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년 니트 맞춤형 지원 • 해외진출청년 지원(K-Move) • 다문화 청년 특화교육
<p>근로자의 생명 안전 보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中企 안전역량 • 안전보건 인프라 • 산업재해보상 	<p>고용서비스 내실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용서비스 내실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취업지원, 구직급여 등 고용 안전망 효율화 - 통합네트워크 증설 	<p>일하는 부모 부담 경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맞돌봄 급여 상향 • 육아휴직 기간 연장 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편 • 난임치료 급여 신설
		<p>취업장벽·애로요인제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: 지원제도 전반 확대 표준사업장·훈련센터 확충 • 고령자: 중장년내일센터 확충 등 • 유연근로 활성화, 장시간 근로 개선

붙임 3

2024년도 고용노동부 예산규모

□ 총지출 33조 6,825억원, '23년 대비 1조 2,680억원(△3.6%) 감소

○ 회계 5조 8,151억원, '23년 대비 8,590억원(△12.9%) 감소

▲ (일반회계) 5조 8,151억원, '23년 대비 7,887억원(△13.3%) 감소

▲ (특별회계) 6,845억원, '23년 대비 703억원(△9.3%) 감소

○ 기금은 27조 8,674억원, '23년 대비 4,090억원(△1.4%) 감소

▲ (고보기금) 16조 4,058억원, '23년 대비 5,049억원(△3.0%) 감소

▲ (산재기금) 9조 8,222억원, '23년 대비 1,817억원(1.9%) 증가

▲ (장고기금) 9,053억원, '23년 대비 576억원(6.8%) 증가

▲ (임채기금) 5,431억원, '23년 대비 925억원(△14.6%) 감소

▲ (근복지금) 1,908억원, '23년 대비 509억원(△21.1%) 감소

〈 '24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〉

(단위: 억원, %)

회계·기금별	'23년 예산 (A)	'24년 예산 (B)	증감 (B-A)	증감율 (%)
■ 총지출(a+b)	349,505	336,825	△12,680	△3.6
- 예산지출(a)	66,741	58,151	△8,590	△12.9
· 일반회계	59,193	51,306	△7,887	△13.3
· 특별회계	7,548	6,845	△703	△9.3
- 기금지출(b)	282,764	278,674	△4,090	△1.4
· 고용보험	169,107	164,058	△5,049	△3.0
· 산재보험	96,406	98,222	1,817	1.9
· 장애인	8,478	9,053	576	6.8
· 임금채권	6,357	5,431	△925	△14.6
· 근로복지	2,417	1,908	△509	△21.1